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2008. 11. 24

연구 책임자 : 김 세 균

공동 연구원 : 공 석 기

보조 연구원 : 임 재 성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51-746

<http://css.snu.ac.kr> | css@snu.ac.kr | T : (02)880-5745~7 | F : (02)880-0976

차례

1. 결과보고서	1
2 <부록 1> 설문응답 요청문	28
3. <부록 2> 조사대상 단체 리스트	29
4. <부록 3> 설문지	30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 서론

2000년대 들어오랜 세월 가려져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소수자 인권과 양심에 관련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는 국가 기구 내의 입장 변화로 번져나갔다. 2004년 5월 하급 법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후 7월 대법원과 8월 현재의 판결에서 유죄와 합헌으로 결론나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이 필요함을 다수의 재판관이 언급했다. 국회 역시 2004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고 2005년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국가 기구 중 최초로 국가인권위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며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압력도 보다 구체화 되었다. 결국 2007년 9월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나름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현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 처방에서 벗어나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차원으로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데 있어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사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소수의 가치와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안보를 무력에 기반한 국방만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개념 규정에서 벗어나서 군 복무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포괄적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상반된 가치체계 간에 화해와 타협의 모습은 분명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근거라 할 것이다.

이런 전지에서 본 연구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단순 찬반 조사를 뛰어 넘어, 사회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과연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5백여 명이 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본 보고서에 담았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조사개요, 결과 요약, 그리고 구체적 설문별 집단 간의 비교분석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별 비교 분석은 대체 복무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구현방법 등에 대해서 각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핵심적인 발견을 요약하고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조사 연구개요

- 1) 설문조사지에는 '사회지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응답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신 사용한 표현이다. '여론지도층'이라는 방식의 표현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이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문가'로서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을 지칭하고자 한다.

조사 연구의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2001년 언론의 보도 이후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고, 다양한 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영역에서 진행된 다수의 여론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찬반 입장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보다 건설적이고 현실적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 문제가 가진 민감성과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여론조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모색되는 대체복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재했다.

정부 역시 2007년 국방부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의견의 추이만을 모니터링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조사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조사 연구의 목적

본 조사연구는 전문가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전문가 집단을 연구의 초점집단(focus groups)으로 삼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이들의 태도, 인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큰 쟁점중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가 궁극적 지향하는 바이다.

조사 과정

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8월 중순에 병무청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의뢰받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조사나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9월 중순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9월 20일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들이 독자적으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총 12인(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 보조연구원 1인 그리고 조사원 8인 및 자료 코딩 1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9월 27일까지 연구원 3인이 3쪽 분량의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과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전화, 팩스, 이메일 및 직접방문 방법을 선택했고,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원 사전 워크숍을 9월 29일에 가졌다. 특별히 변호사, 종교인, 언론계 전문가들의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소속 협회에 사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회원들의 응답을 독려했다. (부록1 협조공문 참조)

설문조사 기간은 약 3주(10월 1일 ~ 10월 21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조사원 중간점검 회의(10월 13일)를 통해 조사원 간의 응답률 높이는 조사 팁을 상호 교환하였고, 응답률이 저조한 전문가 집단 변호사와 기자의 경우 추가 조사대상자를 정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10월 22일에 최종적으로 설문지 554개를 회수하였다. 이후 데이터 코딩과 클리닝 및 통계분석을 거쳐 기초빈도표 및 교차분석 결과를 1차적으로 얻었다. 이를 토대

로 10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핵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조사대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sampling)은 우선 전문가를 다섯 개의 범주(국회의원, 종교인, 변호사, 교수, 그리고 기자)로 나눈 후에 각 집단별로 조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무작위 표집으로 조사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초점집단표집(focus group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집단의 표집 목표 수는 300명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모집단 299명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표집 수는 1,500명으로 정해졌다. 각 전문가 집단별로 모집단 전체 리스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집단별로 표집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리 적용하였다. 각각의 집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의원 299명 전원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종교인의 경우, 개신교, 가톨릭, 불교 3대 종단으로 나누어 종단별로 주요 단체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부록2 참조)

셋째, 법률가의 경우는 변호사로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변호사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리스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진보적 입장과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변호사 단체 두 곳(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를 각각 150명씩 리스트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넷째, 학계의 경우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그리고 지역(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교 10개교, 사립대학교 10개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제 사안에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전공학과(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를 대상으로 각 학과 당 무작위로 5명을 선정하여 최종 500명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다만 선정된 대학교에 관련 전공학과가 없는 경우는 유사 전공예, 행정학과 교수를 조사대상으로 삼거나, 같은 도나 시 지역에 있는 타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예컨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학교 및 학과는 부록2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언론계의 경우는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중을 3:2:1로 두고 표집 목표수 300명에 맞추어 신문 150명, 방송 100명, 그리고 인터넷 50명 조사대상 리스트를 만들었다. 법률계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언론사를 고려하여 7대 신문사, 4대 방송, 그리고 인터넷매체에 소속된 기자 중 정치, 사회, 복지, 군사 영역을 담당기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7대 신문사로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이며, 방송은 KBS, MBC, SBS, YTN을, 인터넷은 인터넷 기자협회와 인터넷 언론네트워크에 있는 명단 중에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차후에 보수 성향의 언론매체 소속 기자들의 응답률 저조를 고려하여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소속 기자를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조사방법

본 조사는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 과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3 참조)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자들 스스로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택하였고, 이메일 조사, 팩스조사, 그리고

직접 방문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각각의 조사방법에서 확인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메일 조사의 장점은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다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스팸메일, 신분노출, 기입방식 등과 같은 단점으로 응답률이 팩스조사 및 직접 방문조사보다 매우 낮다는 특성이 있다. 이번 조사도 이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지만, 집단별로 응답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천주교 소속 종교인의 경우 이메일 응답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최근에 천주교 내에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내부 토론과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메일 조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답을 보인 전문가 집단은 교수이었다.

전문가 대상 조사이기에 대체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수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지를 다운로드받아 직접 기입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특별히 전자 문서 형태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결과,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응답하였기에, 이를 코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신분노출을 꺼려 이메일로 답변하기 보다는 설문지를 출력하여 팩스로 응답내용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메일 조사의 경우는 그 내용이 스팸메일로 처리되거나 응답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세 차례에 걸쳐 조사원의 이메일 계정을 바꾸어 가면서 질문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메일 조사의 장점으로 주목할 내용은 전문가들이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메일 답신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설문 조사의 경우 각 문항의 기타 의견란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문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었다.

둘째, 팩스조사는 그 자체만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이메일 조사와 직접 방문조사와 결합하는 보완적 특성을 보였다. 이메일로 받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는 방식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질문지를 팩스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 응답자 대부분이 팩스로 질문지를 보내왔다. 특히 국회의원의 응답자 대부분은 최소한 3회 이상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에 팩스로 응답지를 보내왔다.

셋째, 직접 방문 조사는 비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회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설문 조사내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자신의 업무 때문에 설문조사에 무관심한 집단에게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비공식적 사전 부탁을 취한 후에 조사원이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수율이 저조한 집단의 응답률을 높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기독교와 불교 소속 종교인의 다수가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냈고, 기자와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후에 직접 방문조사 및 질문지 수령을 진행했다.

이상의 세 가지 설문조사 방법과 관련한 어려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설문지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문항이라고 판단해서 그 편향성을 이유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구체적인 항목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응답자가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응답자체를 거부하였다. 여전히 찬반 자체가 논쟁적인 주제이기에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국회의원 중 몇몇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안과 관련한 설문조사에는 기본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의원실 내부의 원칙을 밝히며 응답을 거부하기도 했다.

요컨대, 이러한 조사방법과 시안 자체의 문제로 야기된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대상 선정, 개인적인 네트워크 동원, 직접 방문조사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마지막 단계인 자료입력과 분석은 우선 회수된 질문지 554개에 대해서 데이터 코딩 및 크리닝을 통하여 원자료(raw data)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1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질문 항목에 대한 빈도와 교차분석을 했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 집단별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문항설계

설문문항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집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 두 번째는 2007년에 발표된 국방부의 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부분이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본 의견 확인 (문항 1)

먼저, 이 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된 주장이 되는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한 동의여부는 4점 척도(매우 동의-동의-반대-매우 반대)를 통해서 확인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 진술 세 문항과 부정적 진술 세 문항을 배치함으로써 응답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각각의 진술에는 찬반 각 입장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요인들이 담겨있기에 개별적인 응답양상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의식지형을 파악하고자 했다.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국방부 방안에 대한 평가 (문항 2)

국방부는 지난 2007년 9월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최초로 구체적인 대체복무 안을 제시한 것이기에 이후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이 발표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풍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 2007년 국방부 안을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구하고자 했다. 이 5가지는 측면은 1) 대체복무 허용 사유, 2) 대체복무 신청가능 시점, 3) 대체복무 수행여건, 4) 대체복무 기간, 5) 대체복무 난이도로 이루어진다.

국방부의 안을 이 5가지 측면으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복무 허용 사유는 종교적 신념에 한정한다. 2) 대체복무 신청가능 시점은 입영 전으로만 한정하며 복무중이나 예비군의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복무방식은 합숙생활이며,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에서 복무여건은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차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국방부 발표 안에 담긴 표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문항으로 구성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 (문항 3 ~ 문항 8)

전문가 집단은 어떠한 대체복무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기본적인 문항 골격은

2) 국방부는 2007년 9월 발표한 안에서 대체복무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2007년 10월 건국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회석 당시 국방부 인력관리팀장이 종교적 신념에 국한하고자 한다는 내부적 입장을 밝힌바 있기에 종교적 신념에 한정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문항을 구성했다.

앞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5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이 때에 난이도 부분은 적합적 복무 영역을 확인하는 설문으로 교체했는데 이는 설문을 통해서 난이도를 묻는 방식이 피상적인 질문과 응답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선 5개의 설문에 하나의 설문을 추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 쿼터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는 2005년 국회 공청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었으며 실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경우에 하나의 과도기적 합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문항을 구성했다.

응답자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인원은 총 554명이다. 각 영역별 응답인원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 51명** (한나라당: 31명 / 민주당: 14명 / 자유선진당: 1명 / 친박연대: 1명 / 민주노동당: 3명 / 무소속: 1명), (지역구: 38명 / 비례대표: 13명)
- **법률가 : 30명**
- **교수 : 99명** (법학과: 13명 / 정치학과: 20명 / 경제학과: 10명 / 사회학과: 27명 / 사회복지학과: 25명 / 기타 1 / 결측값 3)
- **언론인 : 109명** (신문: 52명 / 방송: 45 / 인터넷매체: 12)
- **종교인 : 263명** (개신교: 31 / 불교: 72 / 천주교: 158 / 결측값 2)
- **기타 : 2명**

다른 4개 집단에 비해서 종교인 집단의 비율이 47.5%에 달할 정도로 과표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인 집단 내부적으로도 천주교가 과표집되었다. 이러한 과표집이 전체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집단별 결과를 기본적으로 각각의 설문마다 따로 제시했다.

그러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교집단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나 통계적 기법으로 평준화시킨 이후에 조작한 결과가 실제 종교집단을 포함한 단순 산술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각각의 설문에서 종교인 집단이 대부분 평균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체 결과를 나타냄에 있어서 산술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미세한 통계적 조작이 결과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

전문가 여론조사와 같은 방식에서 응답자가 대상 집단을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오히려 여러 통계적 기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규모를 맞추는 것보다, 명확하게 설문 결과를 드러냄으로서 결과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일반적인 빈도분석의 방법으로 응답결과를 분석했다.

3) 종교집단 내부의 과표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표집된 천주교 집단이 평균의 성향을 보였기에 과표집의 왜곡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에 별도의 통계적 조작을 사용하지 않았다.

3. 조사 결과 요약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감옥으로 보내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5.5%에 달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19.8%에 그쳤다. 유엔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87.5%)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한국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85%) 역시 동일하게 높은 동의를 받았다.

병역이행 형평성에 대한 우려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동의하면서도, 전문가들은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달했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도 40.2%가 찬성했다. 이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함께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 합숙 형태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분야 대체복무를 선호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의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선호했다. 먼저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이하(45.2%)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다. 2배(26.2%)와 현역과 같은 기간(17.9%)이 그 뒤를 이었다. 복무형태는 합숙형태가 57.9%로 과반을 넘는 응답을 보였다. 국방부의 2007년 9월 안에서 제시한 '사회복무 분야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의 배치에 대해서 80.7%가 찬성했는데 이는 높은 복무 난이도를 통해서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한 응답이라고 보인다. 복무 분야는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76.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신청 사유는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는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를 병역거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으로 한정한다는 국방부의 안에 대해서도 69.9%가 반대했으며, 바람직한 대체복무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도 74.9%가 반전 평화주의의 신념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복무 신청 시기는 군 입대 이전까지로

과반수(59.6%)의 전문가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군 입대 이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예비군 병역거부에 있어서는 25%가 병역거부 가능 시점이라고 응답했다. 현역 복무중에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은 14%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 선발인원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63.2%의 사회지도층은 제도 도입 초기의 선발인원 제한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보수적인 응답결과를 보여주었던 국회의원 집단보다 가장 진보적인 언론인 집단의 찬성률이 높은 것은 선발인원 제한의 방식이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이끄는 방식으로도 사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집단별로는 국회의원 집단이 가장 보수적이며, 언론 집단이 가장 진보적임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 응답자 중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국회의 의석 비율과도 유사한 비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집단의 응답결과가 다른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대부분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언론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응답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설문응답에서는 각각의 집단이 서로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집단 내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 불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음

집단 내부를 분석해보면 국회의원 집단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종교인 집단에서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국회의원 집단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35.5%가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은 21.4%에 그쳤다. 복무기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32.3%가 1.5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은 50%가 1.5배 이하에 찬성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 집단 역시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즉,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국회의원 집단의 보수적인 측면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 집단 내부에서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대체복무제 도입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 불교는 56.9%가 찬성한 반면 기독교는 96.7%의 찬성을 보였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사유에서도 불교는 54.2%만이 반전평화주의 신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독교는 96.8%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온 원인중 하나로 응답 과정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집단의 표본이 이 문제에 동의하는 집단으로 조금 치우친 경향이 발생했다. 불교계의 경우는 확연하게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며, 도입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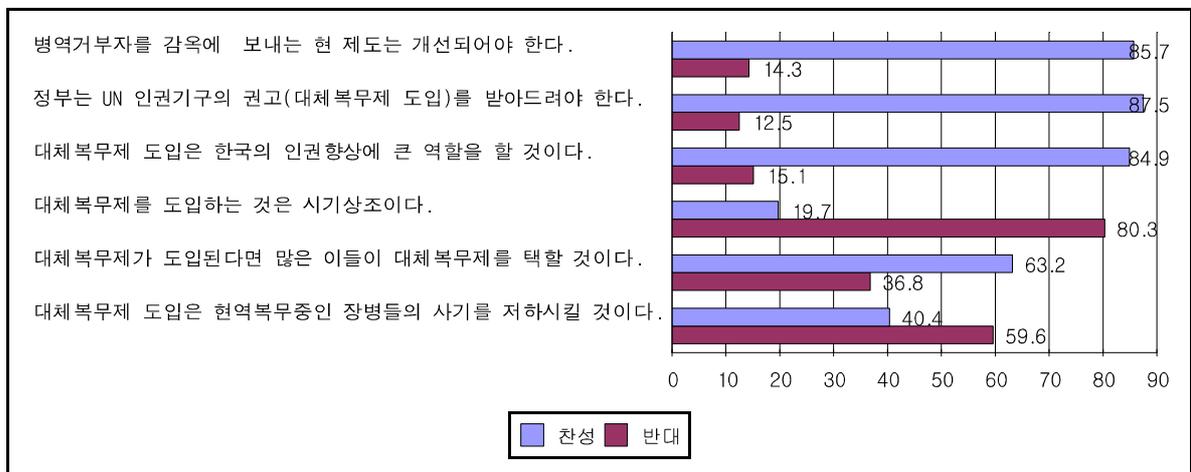
4) 실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국회의원 집단 내부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지만, 민주노동당의 표본이 너무 작아서(3명) 비교하지 않았다.

4 조사 결과 분석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기본 태도 (문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련된 응답자의 기본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진술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을 구성했다. 찬반입장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4점 척도로 문항을 설계했으며, 찬반으로만 구분할 경우에는 '매우 동의'와 '동의를 찬성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반대로 합산해서 비교했다.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을 각각 3개씩 배치했다. 각각의 설문분석에서 전체빈도수는 문항별 결측값과 5개 집단 이외의 기타 집단으로 응답한 문항을 제외한 숫자이다. 따라서 문항마다 총 응답수가 조금씩 차이를 가진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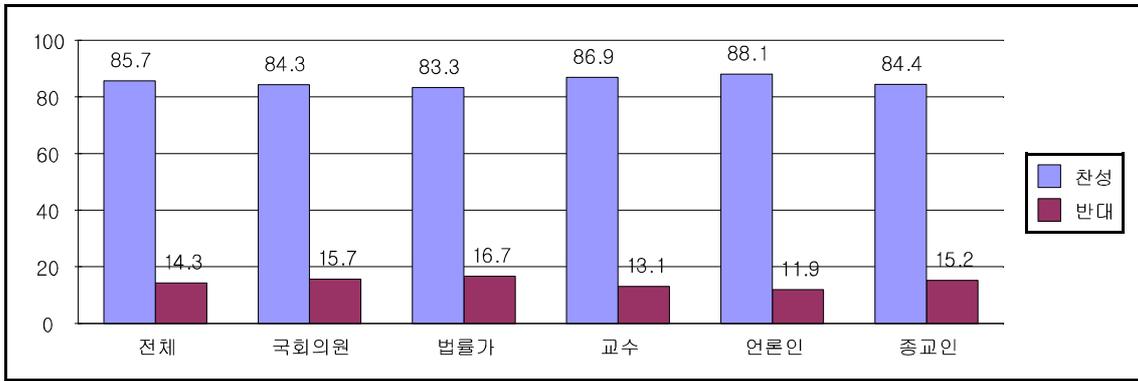
<분석>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UN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것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었다. 과반이 넘는 전문가들은 실제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0.4%에 달하는 이들이 현역복무중인 장병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개별 문항분석 - ①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n=551)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269	203	472	50	29	79
	퍼센트	48.6	36.6	85.2	9.0	5.2	14.3
국회의원	빈도	11	32	43	7	1	8

	퍼센트	21.6	62.7	84.3	13.7	2.0	15.7
법률가	빈도	19	6	25	4	1	5
	퍼센트	63.3	20.0	83.3	13.3	3.3	16.7
교수	빈도	49	37	86	10	3	13
	퍼센트	49.5	37.4	86.9	10.1	3.0	13.1
언론인	빈도	48	48	96	9	4	13
	퍼센트	44.0	44.0	88.1	8.3	3.7	11.9
종교인	빈도	142	80	222	20	20	40
	퍼센트	54.0	30.4	84.4	7.6	7.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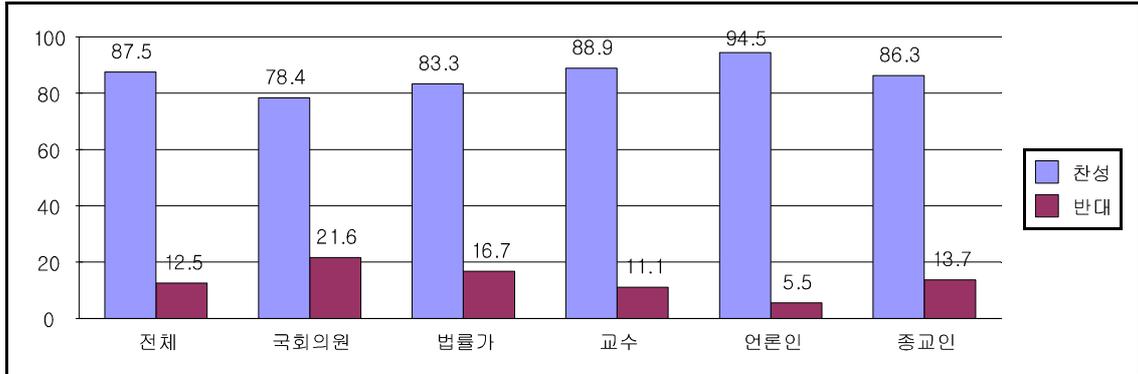
<분석>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절대 다수(85.2%)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동의 응답이 많았던 언론인 집단은 88.1%로 10명 중 9명이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문항분석 - ② 정부는 UN 인권기구의 권고(대체복무제 도입)를 받아들여야 한다.

(n=551)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249	233	482	53	16	69
	퍼센트	44.9	42.1	87.5	9.6	2.9	12.5
국회의원	빈도	6	34	40	11	0	11
	퍼센트	11.8	66.7	78.4	21.6	0.0	21.6
법률가	빈도	17	8	25	5	0	5
	퍼센트	56.7	26.7	83.3	16.7	0.0	16.7
교수	빈도	48	40	88	11	0	11
	퍼센트	48.5	40.4	88.9	11.1	0.0	11.1
언론인	빈도	43	60	103	5	1	6
	퍼센트	39.4	55.0	94.5	4.6	0.9	5.5
종교인	빈도	135	91	226	21	15	36

	퍼센트	51.5	34.7	86.3	8.0	5.7	13.7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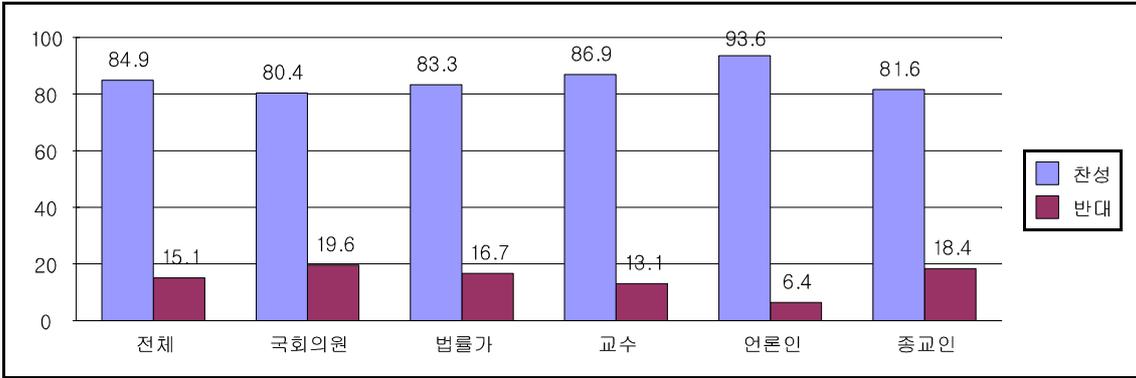
<분석>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주된 근거가 되는 주장인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87.5%)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지난 2006년 말 두 차례나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반이며 즉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의원 집단이 가장 보수적으로 UN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78.4%) 언론인은 절대 다수(94.5%)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조약의 국내효력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문항분석 - ③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의 인권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n=550)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217	250	467	68	15	83
	퍼센트	39.5	45.5	84.9	12.4	2.7	15.1
국회의원	빈도	5	36	41	9	1	10
	퍼센트	9.8	70.6	80.4	17.6	2.0	19.6
법률가	빈도	17	8	25	5	0	5
	퍼센트	56.7	26.7	83.3	16.7	0.0	16.7
교수	빈도	42	44	86	12	1	13
	퍼센트	42.4	44.4	86.9	12.1	1.0	13.1
언론인	빈도	39	63	102	6	1	7
	퍼센트	35.8	57.8	93.6	5.5	0.9	6.4
종교인	빈도	114	99	213	36	12	48
	퍼센트	43.7	37.9	81.6	13.8	4.6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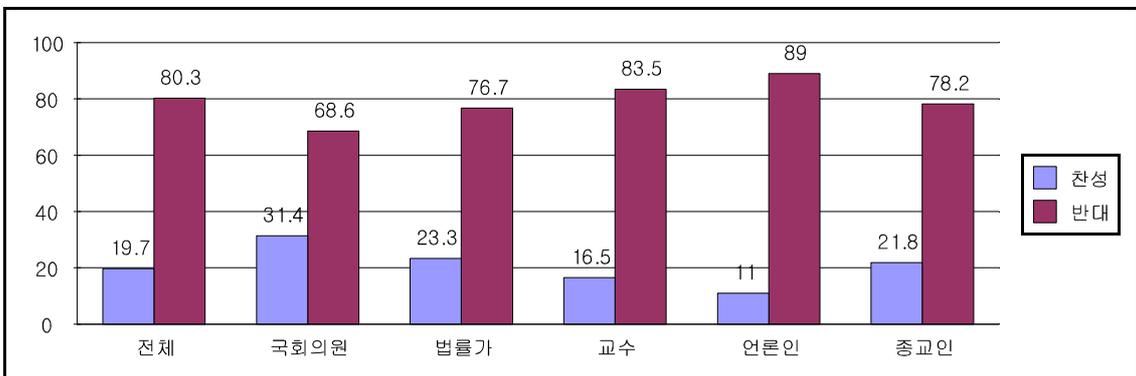


<분석> 대체복무제를 도입이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높은 (84.9%) 찬성을 보였다. 한국사회에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간의 대립으로 이해되어온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개별 문항분석 - ④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n=549)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25	83	108	258	183	441
	퍼센트	4.6	15.1	19.7	47.0	33.3	80.3
국회의원	빈도	2	14	16	30	5	35
	퍼센트	3.9	27.5	31.4	58.8	9.8	68.6
법률가	빈도	4	3	7	7	16	23
	퍼센트	13.3	10.0	23.3	23.3	53.3	76.7
교수	빈도	3	13	16	45	36	81
	퍼센트	3.1	13.4	16.5	46.4	37.1	83.5
언론인	빈도	1	11	12	64	33	97
	퍼센트	0.9	10.1	11.0	58.7	30.3	89.0
종교인	빈도	15	42	57	112	93	205
	퍼센트	5.7	16.0	21.8	42.7	35.5	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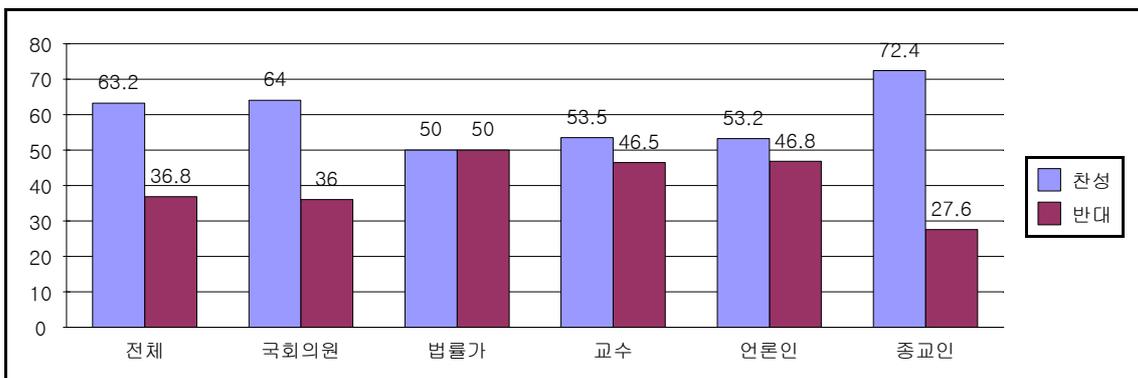


<분석>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의 응답 역시 앞선 응답의 결과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답변 순서가 반대임에도 앞선 응답과 일관된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보였기에 응답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반대쪽 근거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상조'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80.3%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국회의원 집단은 앞선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의 응답과 비교했을 때, 15%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판단된다.

개별 문항분석 - 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다.

(n=549)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97	250	347	187	15	202
	퍼센트	17.7	45.5	63.2	34.1	2.7	36.8
국회의원	빈도	8	24	32	17	1	18
	퍼센트	16.0	48.0	64.0	34.0	2.0	36.0
법률가	빈도	7	8	15	13	2	15
	퍼센트	23.3	26.7	50.0	43.3	6.7	50.0
교수	빈도	13	40	53	42	4	46
	퍼센트	13.1	40.4	53.5	42.4	4.0	46.5
언론인	빈도	16	42	58	48	3	51
	퍼센트	14.7	38.5	53.2	44.0	2.8	46.8
종교인	빈도	53	136	189	67	5	72
	퍼센트	20.3	52.1	72.4	25.7	1.9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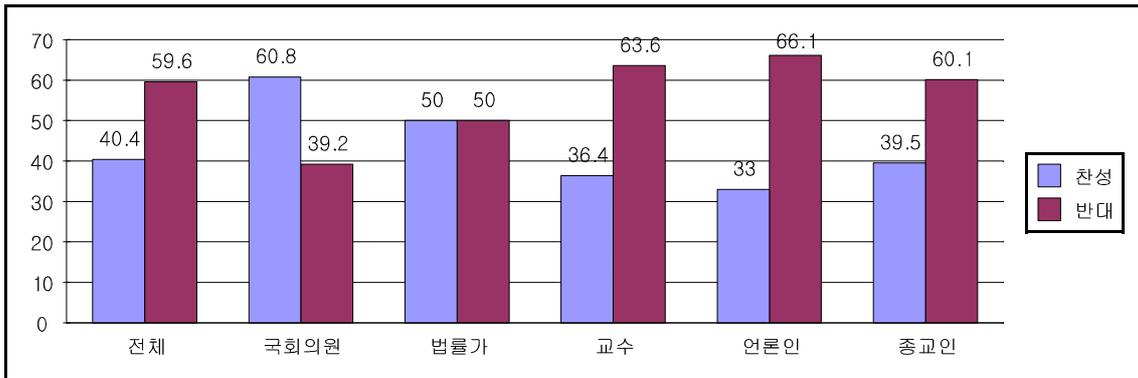
<분석> 이전까지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압도적으로 긍정적 응답을 보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집단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이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도 과반이 넘는 이들(63.2%)이 이에 동의했다. 이는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에서 대체복무라는 다른 방식의 복무가 생긴다면 그것을 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설문(에 코멘트)을 달아서 이러한 방식의 설문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했는데, “어떤 대체

복무인가에 따라서 변할 것이라"라는 의견이었다. 즉,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의 조건들이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에 대한 찬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으로 토론되는 모습에 있어서도 유효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문항분석 - ⑥ 대체복무제 도입은 현역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n=550)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71	151	222	264	64	328
	퍼센트	12.9	27.5	40.4	48.0	11.6	59.6
국회의원	빈도	10	21	31	17	3	20
	퍼센트	19.6	41.2	60.8	33.3	5.9	39.2
법률가	빈도	6	9	15	10	5	15
	퍼센트	20.0	30.0	50.0	33.3	16.7	50.0
교수	빈도	8	28	36	50	13	63
	퍼센트	8.1	28.3	36.4	50.5	13.1	63.6
언론인	빈도	10	26	36	62	10	72
	퍼센트	9.2	23.9	33.0	56.9	9.2	66.1
종교인	빈도	37	67	104	125	33	158
	퍼센트	14.1	25.5	39.5	47.5	12.5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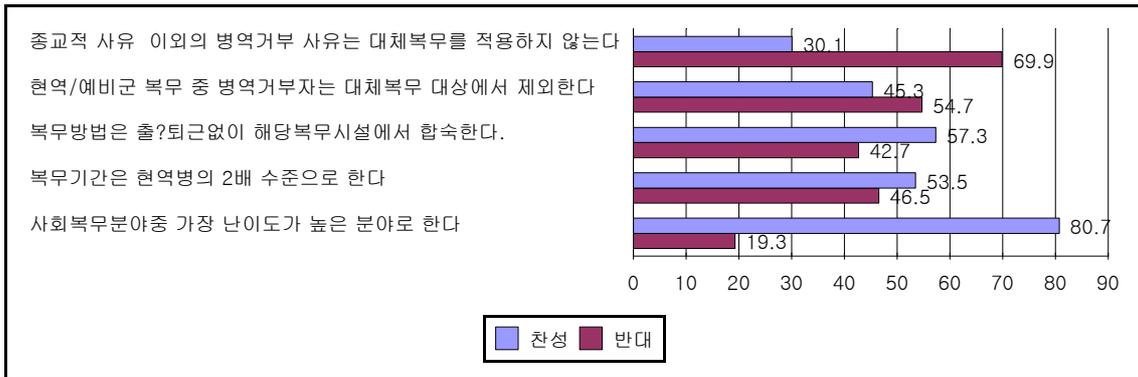
<분석>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역 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진술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넘는 (59.6%) 전문가들이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40.4%에 달하는 이들이 현역 군인의 사기가 저하됨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5)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문항의 분석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빈도분석과 함께 설문지에 표시된 전문가들의 코멘트 등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 설문지 분석 과정에서 약간의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비록 정식적인 설문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 대체복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국방부 방안에 대한 의견(문2)

2007년 9월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안을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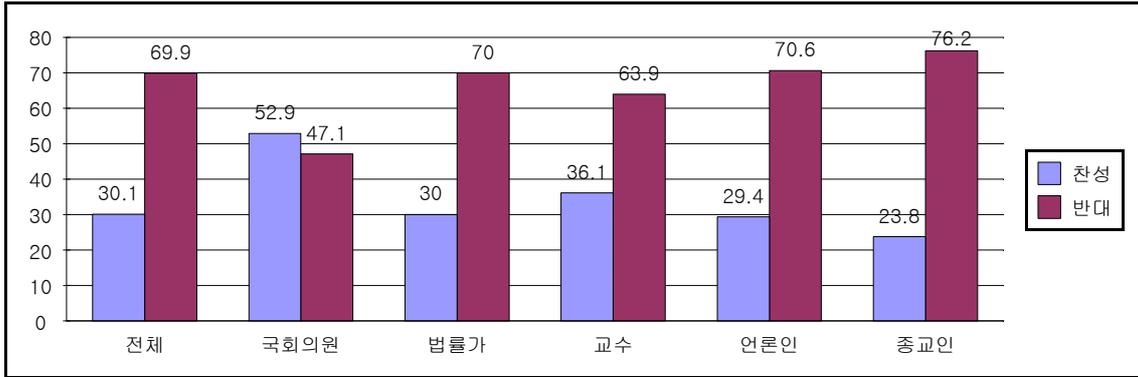
<분석> 어떤 이들을 대체복무의 대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안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병역거부의 사유를 종교적 신념에 한정하는 것에는 69.9%가 반대했고 현역과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거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도 54.7%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복무 기간과 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사회복무분야에 있어서 가장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업무로 대체복무를 구성한다는 국방부의 안에 대해서 80.7%가 찬성했다. 이는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 수월할 것이고,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방식의 복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병의 2배 수준의 복무기간에 있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개별 문항분석 - ① 종교적 사유 이외의 병역거부 사유는 대체복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n=548)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38	127	165	273	110	383
	퍼센트	6.9	23.2	30.1	49.8	20.1	69.9
국회의원	빈도	2	25	27	19	5	24
	퍼센트	3.9	49.0	52.9	37.3	9.8	47.1
법률가	빈도	2	7	9	11	10	21
	퍼센트	6.7	23.3	30.0	36.7	33.3	70.0
교수	빈도	10	25	35	47	15	62
	퍼센트	10.3	25.8	36.1	48.5	15.5	63.9
언론인	빈도	2	30	32	60	17	77
	퍼센트	1.8	27.5	29.4	55.0	15.6	70.6

종교인	빈도	22	40	62	136	63	199
	퍼센트	8.4	15.3	23.8	52.1	24.1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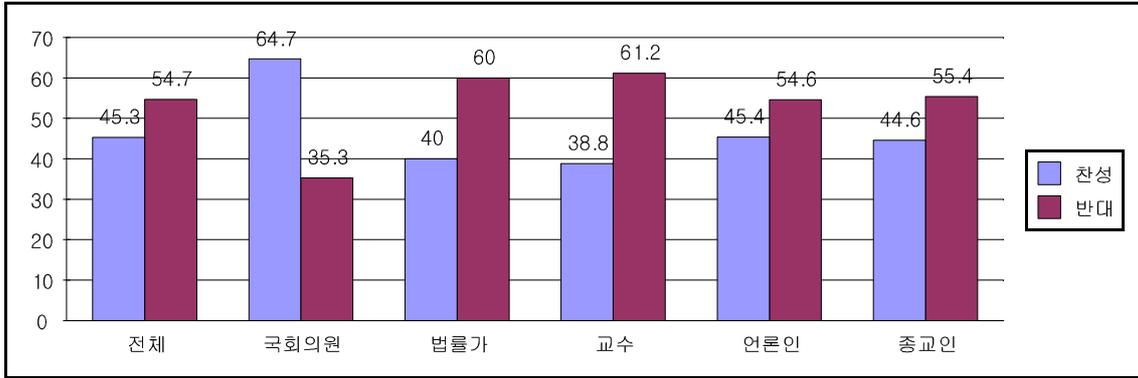


<분석> 국회의원 집단의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는 모두 반대가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69.9%의 전문가들이 이 국방부 입장에 반대했다. 특히 다른 응답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던 언론인 집단보다 종교인 집단의 반대가 더 높았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특정 교파의 문제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 집단이 오히려 이 문제를 특정 종교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인 양심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개별 문항분석 - ② 현역/예비군 복무 중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n=547)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51	197	248	223	76	299
	퍼센트	9.3	36.0	45.3	40.8	13.9	54.7
국회의원	빈도	3	30	33	14	4	18
	퍼센트	5.9	58.8	64.7	27.5	7.8	35.3
법률가	빈도	2	10	12	12	6	18
	퍼센트	6.7	33.3	40.0	40.0	20.0	60.0
교수	빈도	9	29	38	48	12	60
	퍼센트	9.2	29.6	38.8	49.0	12.2	61.2
언론인	빈도	5	44	49	48	11	59
	퍼센트	4.6	40.7	45.4	44.4	10.2	54.6
종교인	빈도	32	84	116	101	43	144
	퍼센트	12.3	32.3	44.6	38.8	16.5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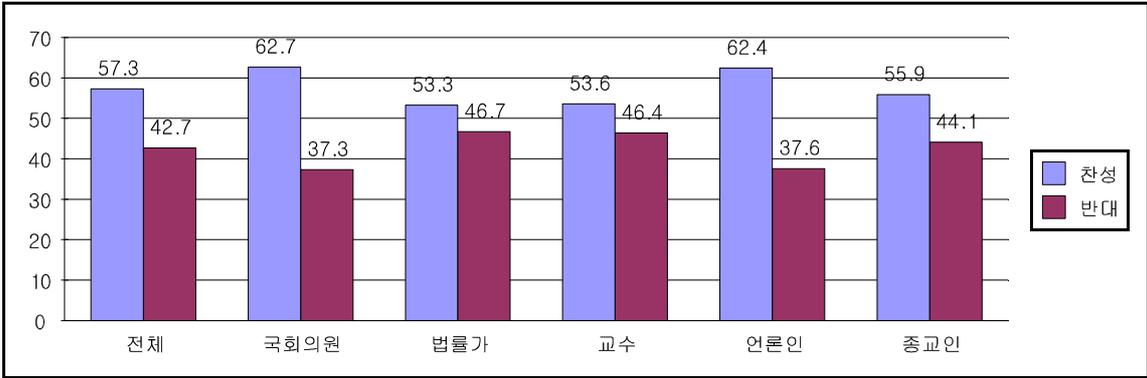


<분석> 이 문항 역시 국회의원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단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찬반의 입장이 다른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대립하고 있기에 이후 대체복무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07년 9월에 제시한 안에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한 경우에는 그 신념의 진실성이 의심되기에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없음을 현역 입영 전으로 시기를 한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그 행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었다. 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이다.

개별 문항분석 - ③ 복무방법은 출·퇴근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한다.

(n=548)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83	231	314	203	31	234
	퍼센트	15.1	42.2	57.3	37.0	5.7	42.7
국회의원	빈도	6	26	32	19	0	19
	퍼센트	11.8	51.0	62.7	37.3	0.0	37.3
법률가	빈도	3	13	16	13	1	14
	퍼센트	10.0	43.3	53.3	43.3	3.3	46.7
교수	빈도	13	39	52	42	3	45
	퍼센트	13.4	40.2	53.6	43.3	3.1	46.4
언론인	빈도	13	55	68	37	4	41
	퍼센트	11.9	50.5	62.4	33.9	3.7	37.6
종교인	빈도	48	98	146	92	23	115
	퍼센트	18.4	37.5	55.9	35.2	8.8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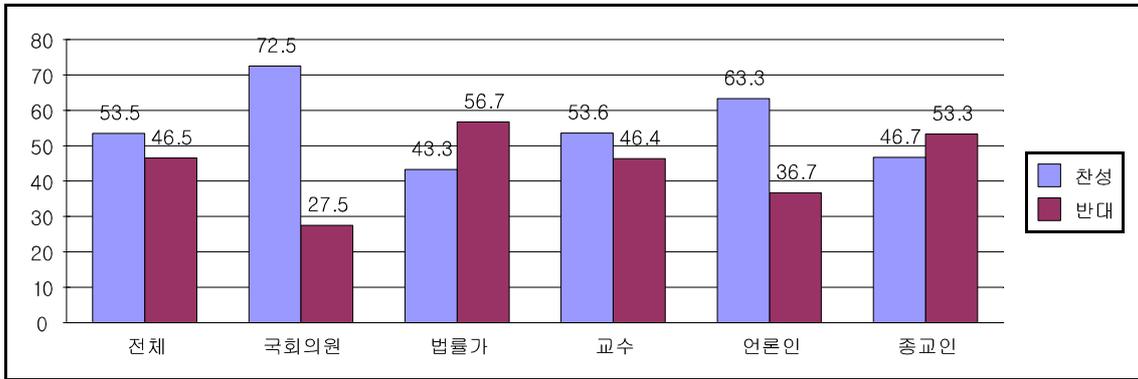
<분석> 복무 방식은 합숙형태로 하는 국방부 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57.3%)의 전문가들이 찬성했다. 이 설문에서 있어서 개별적인 코멘트 중 하나는 “해당 복무 시설에서 합숙여부는 배치 분야와 난이도와 복무기간에 연동하여서 결정해야 한다. 가령 출퇴근이라면 현역복무의 2배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실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논의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별적인 조건만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무 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대체복무제 관련한 과거의 설문방식과 이번 전문가 조사 설문이 가진 공통적인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합숙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로 결정이 될 경우에 해당 업무가 합숙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많은 인원의 합숙이 오히려 해당 시설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바탕에는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야 한다는 ‘징벌적’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현실적인 요소들이 온전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국방부는 2007년 안에서 증중환자나 노인수발과 같은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업무로 대체복무 영역을 규정하면서 합숙복무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구체적인 안을 바탕으로 합숙여부나 복무기간, 난이도가 연동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개별 문항분석 - ④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으로 한다

(n=546)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80	212	292	217	37	254
	퍼센트	14.7	38.8	53.5	39.7	6.8	46.5
국회의원	빈도	5	32	37	14	0	14
	퍼센트	9.8	62.7	72.5	27.5	0.0	27.5
법률가	빈도	4	9	13	14	3	17
	퍼센트	13.3	30.0	43.3	46.7	10.0	56.7
교수	빈도	12	40	52	41	4	45
	퍼센트	12.4	41.2	53.6	42.3	4.1	46.4
언론인	빈도	16	53	69	33	7	40
	퍼센트	14.7	48.6	63.3	30.3	6.4	36.7
종교인	빈도	43	78	121	115	23	138
	퍼센트	16.6	30.1	46.7	44.4	8.9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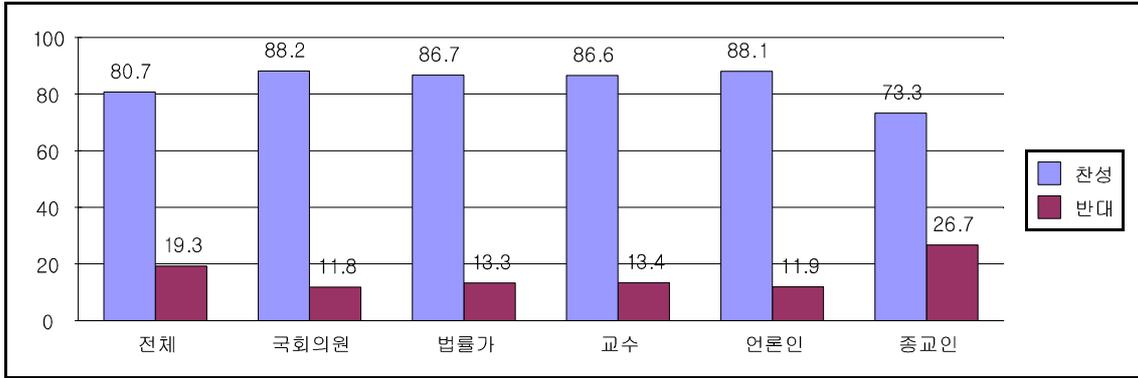
<분석> 과반수(53.5%)의 전문가들이 대체복무제가 현역 복무의 2배에 해당하는 복무 기간을 가진다는 것에 찬성했지만 찬반의 입장이 팽팽했다. 이 부분 역시 대체복무제 신청 가능 시점과 함께 중요한 논의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사회단체들은 1.5배의 기간을 넘는 것은 또 다른 징벌적 요소라는 UN의 해석을 근거로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으로 대체복무제의 기간이 설정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언론인 집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집단을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찬성 응답(63.3%)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응답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봤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개별 문항분석 - ⑤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지 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한다.

(n=549)

구분		매우동의	동의	동의합계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반대합계
집단 전체	빈도	143	300	443	91	15	106
	퍼센트	26.0	54.6	80.7	16.6	2.7	19.3
국회의원	빈도	10	35	45	6	0	6
	퍼센트	19.6	68.6	88.2	11.8	0.0	11.8
법률가	빈도	6	20	26	3	1	4
	퍼센트	20.0	66.7	86.7	10.0	3.3	13.3
교수	빈도	23	61	84	10	3	13
	퍼센트	23.7	62.9	86.6	10.3	3.1	13.4
언론인	빈도	28	68	96	10	3	13
	퍼센트	25.7	62.4	88.1	9.2	2.8	11.9
종교인	빈도	76	116	192	62	8	70
	퍼센트	29.0	44.3	73.3	23.7	3.1	26.7



<분석>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 문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찬성 응답(80.7%)가 확인되었다. 각 집단 역시 모두 동일한 양상이었는데, 종교인 집단이 비교적 낮은 찬성 비율(73.3%)를 보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찬성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매우 동의'가 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종교인 집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안(문3~문8)

바람직한 대체복무제의 모습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다. 앞선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5가지로 구별했던 대체복무제의 쟁점을 문항 5개로 질문하고, 이에 더해해서 2006년 국회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대체복무제 시행 초기에 쿼터를 두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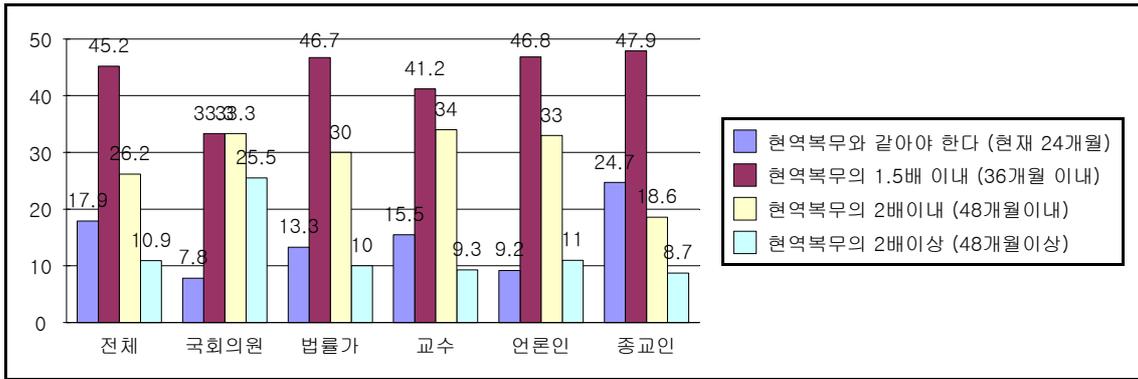
2004년 실시된 조선일보-한국갤럽(2004. 5. 24) 조사(이하 2004년 여론조사)와 2005년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된 '병역 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하 2005년 여론조사)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문항별로 비교하도록 하겠다.

개별 문항분석 - 문3)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550)

구분		현역복무와 같아야 한다 (현재 24개월)	현역복무의 1.5배 이내 (36개월 이내)	현역복무의 2배 이내 (48개월 이내)	현역복무의 2배 이상 (48개월 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집단 전체	빈도	98	248	144	60		
	퍼센트	17.9	45.2	26.2	10.9		
국회의원	빈도	4	17	17	13		
	퍼센트	7.8	33.3	33.3	25.5		
법률가	빈도	4	14	9	3		
	퍼센트	13.3	46.7	30.0	10.0		
교수	빈도	15	40	33	9		
	퍼센트	15.5	41.2	34.0	9.3		

언론인	빈도	10	51	36	12
	퍼센트	9.2	46.8	33.0	11.0
종교인	빈도	65	126	49	23
	퍼센트	24.7	47.9	18.6	8.7



<분석> 바람직한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가 가장 많은 응답률(45.2%)을 보였다. 국회의원 집단이 가장 보수적인 응답양상을 보였는데 25%가 현역 복무의 2배 이상에 응답했다. 현역복무가 같아야 한다는 응답까지를 포함하면 과반수(63.1%)의 전문가들이 현역 복무와 같거나 1.5배 이내로 대체복무제의 기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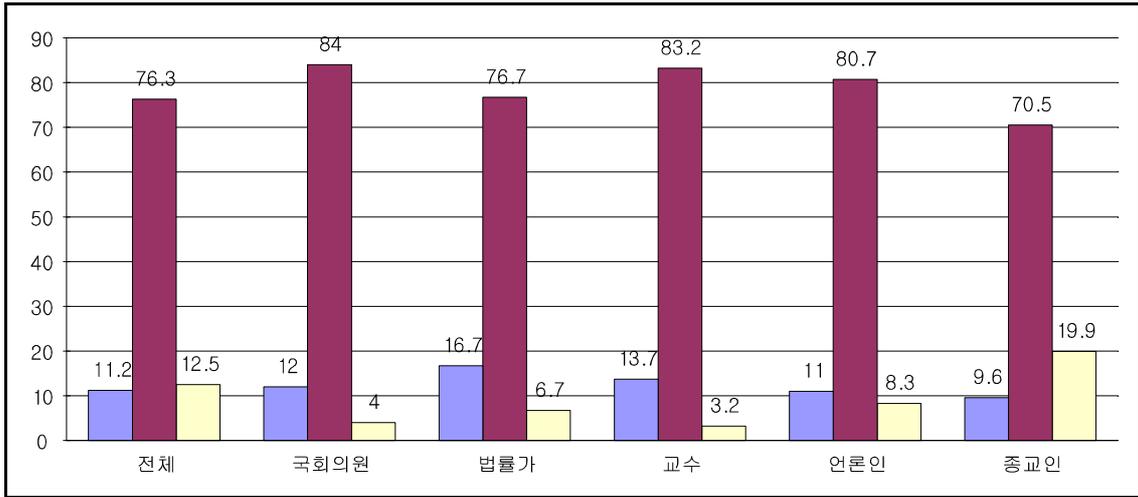
이는 과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비해서 보수적인 응답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여론조사에서는 33.2%가 현재 군 복무기간과 같아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복무기간보다 1~11개월 길어야 한다는 응답은 18.6%였다. 2005년 조사에서는 45.4%가 당시 복무 기간과 같았던 26개월을 선호하였다. 이는 실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의 구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인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개별 문항분석 - 문4)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한 복무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n=545)

구분		소방서,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NGO) 등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근무
집단 전체	빈도	61	416	68
	퍼센트	11.2	76.3	12.5
국회의원	빈도	6	42	2
	퍼센트	12.0	84.0	4.0
법률가	빈도	5	23	2
	퍼센트	16.7	76.7	6.7
교수	빈도	13	79	3
	퍼센트	13.7	83.2	3.2
언론인	빈도	12	8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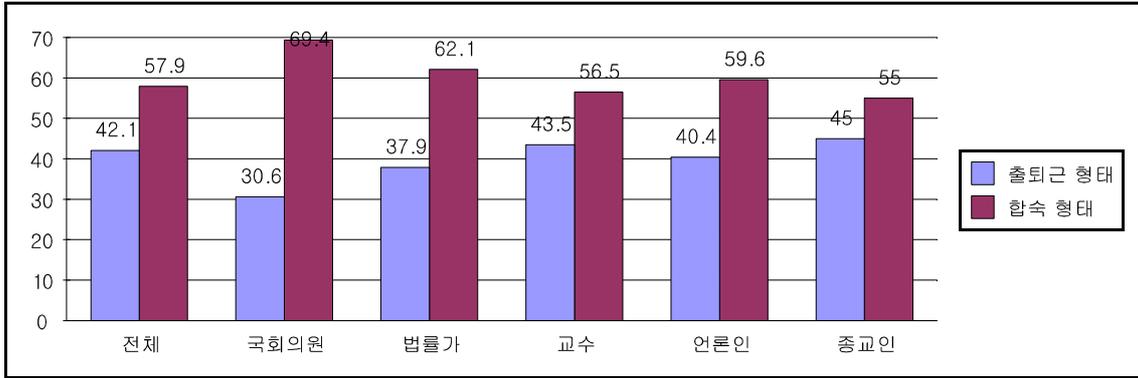
	퍼센트	11.0	80.7	8.3
종교인	빈도	25	184	52
	퍼센트	9.6	70.5	19.9



<분석> 76,3%의 높은 비율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복무를 선호했다.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응답결과의 양상을 보였는데 국회의원 집단에서 84%의 가장 높은 비율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복무를 적합한 방식이라고 응답했다. “특수한 전문분야를 포함해서 이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다양한 영역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자”라는 실용적인 코멘트도 존재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선택하면서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여야 하며, 이에 맞는 교육 내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는 현재 이루어지는 공익근무 복무실태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보인다.

개별 문항분석 - 문5)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복무 형태는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539)

구분		출퇴근 형태	합숙 형태
집단 전체	빈도	227	312
	퍼센트	42.1	57.9
국회의원	빈도	15	34
	퍼센트	30.6	69.4
법률가	빈도	11	18
	퍼센트	37.9	62.1
교수	빈도	40	52
	퍼센트	43.5	56.5
언론인	빈도	44	65
	퍼센트	40.4	59.6
종교인	빈도	117	143
	퍼센트	45.0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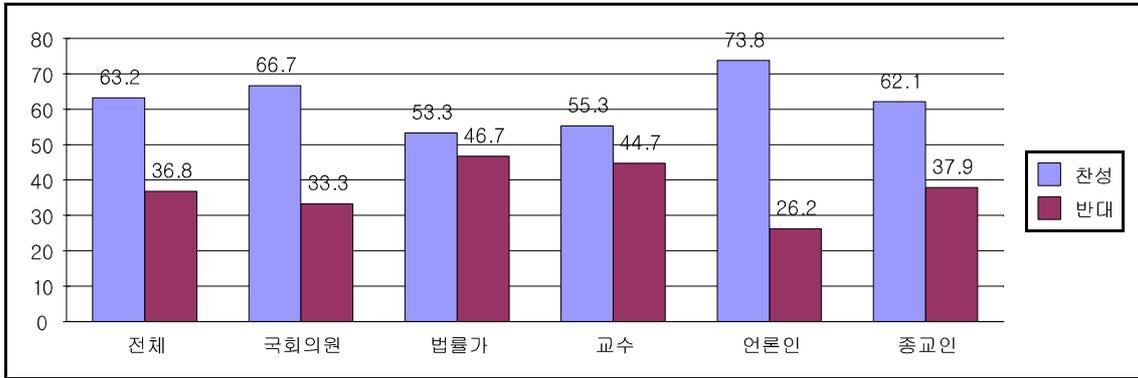


<분석> 과반수(57.9%)의 전문가들이 합숙형태의 복무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앞선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응답 결과이다. 개별적인 코멘트로는 “출퇴근과 합숙, 이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하려고 너무 강요하는 느낌”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이 설문은 과거에 진행된 대체복무제 관련 설문을 참고해서 출·퇴근과 합숙의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구성한 것인데, 실제 복무 여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합숙 여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이 바탕이 되었다.

개별 문항분석 - 문6)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초기에 그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예: 1년에 천 명으로 제한)으로 사회적 우려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538)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집단 전체	빈도	340	198
	퍼센트	63.2	36.8
국회의원	빈도	34	17
	퍼센트	66.7	33.3
법률가	빈도	16	14
	퍼센트	53.3	46.7
교수	빈도	52	42
	퍼센트	55.3	44.7
언론인	빈도	79	28
	퍼센트	73.8	26.2
종교인	빈도	159	97
	퍼센트	62.1	37.9



<분석> 과반수(63.2%)의 전문가들이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 인원 제한을 통한 사회적 우려에 대처하는 방식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인 집단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는데(73.8%) 이는 다른 문항에서 응답했던 언론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국회의원 집단의 찬성응답과는 조금 다른 맥락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인원 제한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에서 나온 응답일 수 있다.

법률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찬성 비율(53.3%)이 나왔는데 이는 이러한 인원 제한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코멘트에서도 “인원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인권향상이라는 대체복무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실제 이 결과가 발표된 토론회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러한 인원 제한의 방식이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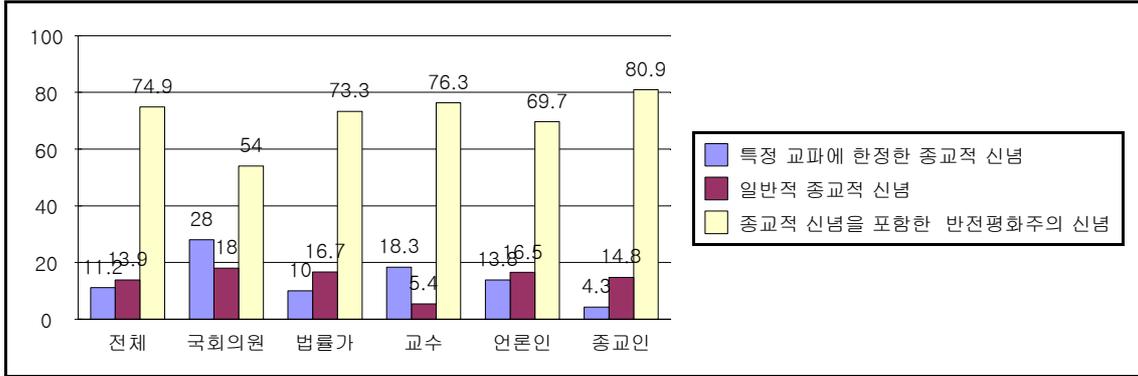
인원제한에 대한 제안은 2005년에 열린 병역법 개정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제시된 바가 있다. 이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많이 이들이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며 양심을 판단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우려로 인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늦출 것만이 아니라 쿼터를 초기에 설정해서 시행해보자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실제 이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시행되었던 방법이기도 하다.

개별 문항분석 - 문7)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허용 사유가 어느 범위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538)

구분		특정 교파에 한정된 종교적 신념	일반적 종교적 신념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
집단 전체	빈도	60	75	403
	퍼센트	11.2	13.9	74.9
국회의원	빈도	14	9	27
	퍼센트	28.0	18.0	54.0
법률가	빈도	3	5	22
	퍼센트	10.0	16.7	73.3
교수	빈도	17	5	71
	퍼센트	18.3	5.4	76.3

언론인	빈도	15	18	76
	퍼센트	13.8	16.5	69.7
종교인	빈도	11	38	207
	퍼센트	4.3	14.8	80.9



<분석> 74.9%에 전문가들은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의 신념까지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했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특정 종교의 교파이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오태양 이후의 반전평화주의의 신념의 병역거부자들이 많은 활동을 했기에 그 영향으로 전문가들이 병역거부를 폭넓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 이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교파에 한정할 경우 종교 특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일반적 종교적 신념에 한정할 경우 2001년 이후에 등장하는 평화주의의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이 경우 기준 설정과 심의 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보통 종교적 신념에서 정치적 신념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미 전문가들이 반전평화주의의 신념까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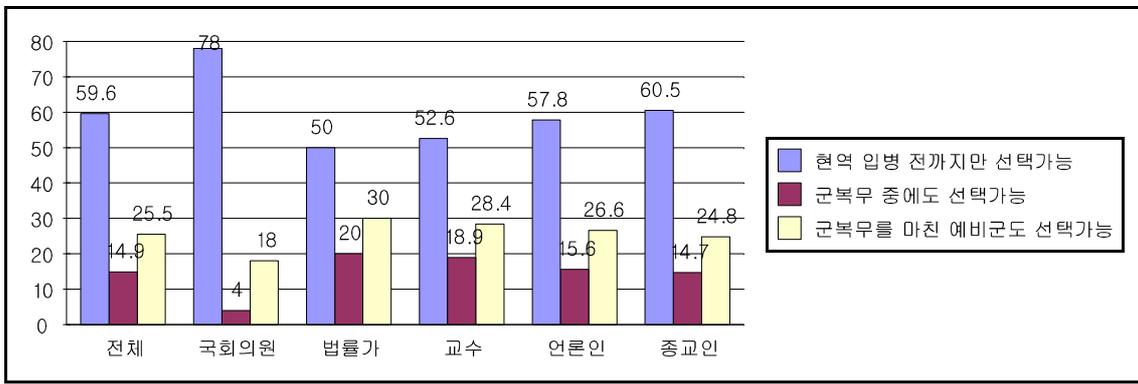
신념이외의 다른 상황적 요소를 고려해 보지는 코멘트도 존재하였다. “홀부모를 부양해야 할 유일한 자녀인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할 수 있게 하지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대체복무제도와 면제 혹은 특혜와 혼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코멘트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여전히 대체복무제도가 면제나 현역보다 쉬운 복무로 인식되는 경향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문항분석 - 문8)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539)

구분	현역 입병 전까지만 선택가능	군복무 중에도 선택가능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도 선택가능	
집단 전체	빈도	323	81	138
	퍼센트	59.6	14.9	25.5

국회의원	빈도	39	2	9
	퍼센트	78.0	4.0	18.0
법률가	빈도	15	6	9
	퍼센트	50.0	20.0	30.0
교수	빈도	50	18	27
	퍼센트	52.6	18.9	28.4
언론인	빈도	63	17	29
	퍼센트	57.8	15.6	26.6
종교인	빈도	156	38	64
	퍼센트	60.5	14.7	24.8



<분석> 과반수(59.6%)의 전문가들이 현역 입영 전까지만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뚜렷하게 높은 비율(78%)로 현역 입영 전까지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설문에서 있어서 주목할 점은 모든 집단에서 군 복무 중에도 선택가능하다는 의견보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에 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항구성에 있어서 후자가 전자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함에 불구하고 후자에 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것은 이 문항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자들에게 이해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도 선택가능' 문항이 앞선 기간을 모두 포함한 의미라기보다는 예비군 복무 중에 병역거부를 택할 수 있는가로 이해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비군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도 존재하며, 전문가 중 25%의 응답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대체복무 도입의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군 병역거부의 문제는 병역거부의 시점과는 별개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본 조사에는 별도의 문항을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수준의 확인은 이루어졌다고 본다.

5. 결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진행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연구를 통해서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여졌던 찬반논쟁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조사 대상을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를 택했고, 문항의 구성 역시 일반적인 찬반을 넘어서서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 안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체복무제도의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554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적인 항목들과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선 분석을 통해서 언급했기에 이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평가와 이후 대체복무제 논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 연구가 가질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인에 대한 여론조사와 견주었을 때 전문가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의 민감성과 생소함으로 인해서 일반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거나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 설문에서 확인한 바는 대체복무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라는 것과 현역 장병의 사기저하 부분이었다. 본격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 이에 대비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2007년 국방부 안에 대한 평가와 대체복무제의 각 측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두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누구’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전평화주의의 신념가치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으며 예비군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반면, ‘어떤’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 확인되었다. 높은 난이도의 업무영역에서 현역의 1.5배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2배의 복무기간은 일반 여론조사나 전문가 여론조사 모두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1.5배 이상의 기간은 또 다른 형벌이라는 UN의 권고도 아니더라도, 이미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현역 복무와 동일한, 혹은 보다 높은 난이도라면 복무기간을 늘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복무 분야와 여건에 따라서 복무 기간과 복무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2007년 안에서 국방부는 2배 복무기간의 근거를 공중보건의와 같은 대체복무의 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것에서 끌어냈는데, 이는 복무여건이나 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였다. 이미 공군과 해군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육군과 복무기간에 차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체복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연구들은 법학을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와 국제인권규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쟁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시작에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Charles C. Moskos and John Whiteclay Chambers. 1993. *The New Conscientious Objection: From Sacred to Secular Resistance*.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landermans, Bert and Suzanne Staggenborg. 2002.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국가인권위원회. 2004.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국방부. 2007.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 나달숙. 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41집: 453-47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병역거부 연대회의. 200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 제58차 인권위원회 보고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병역거부 연대회의·전쟁저항자 인터네셔널. 2004.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문제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
- 안경환·장복희 엮음. 2002.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 윤영철. 200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형사정책] 16권 2호:93-120.
- 이남석. 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 이석우 엮음. 2005. [양심적 병역거부: 2005년 현실진단과 모색]. 사람생각.
- 장복희. 2006.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헌법학연구] 12권 5호: 329-357.
- 정인섭 편역 2000.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 조국. 2007.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부록 1> 설문응답 요청문

“겨레와 함께 미래로”



사회과학연구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협조요청

1. 사회 공익 증진에 애쓰시는 귀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이번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는 ‘군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 지도층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군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제언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동 연구조사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 아 래 -

- 가. 연구조사명 :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 나. 조사대상자 : 국회의원, 종교계, 법조계(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 (총 1,500명)
- 다. 조사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15일 (15일간)
- 라.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방문 조사 혹은 이메일, 팩스 조사)
- 마. 질문내용 : 대체 복무제도 도입 및 방법에 대한 의견 (3 페이지 분량)
- 바. 조사발표 : 2008년 10월 28일

3. 본 조사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담당 연구원(공석기 박사 / T.880-25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수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귀 단체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설문지 양식, 끝.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장

수신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수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나님의 성회, 대한성공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한불교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대한변호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인터넷기자협회

★조교

서아람

행정주사

손석주

원장

09/30
김세균

협조사

시행 사회과학연구원-1131 (2008.09.30.) 접수 ()

우 151-74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 http://it4u.snu.ac.kr

전화 02-880-5475

/전송 02-886-0976

/ arseo@snu.ac.kr

/ 공개

<부록 2> 조사대상 단체 리스트

종교계 :

<가톨릭> 150 - 200명 정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www.cbck.or.kr> : 20-30명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http://www.brothers.or.kr/> : 40명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http://www.nuns.or.kr/> : 40명
- 각 교구별 사제(16개 교구) : 50-100명

<개신교> 150 - 200명 정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http://www.cck.or.kr/> : 100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http://www.gapck.org/> 70
- 예장합동(극보수) 25
- 예장통합(중도보수) 25
- 예장고신(보수-근본파) 20
- 예수교대한감리회(예감) 3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http://www.kncc.or.kr/> : 100명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 <http://www.prok.org/> : 50
-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http://kmc.or.kr/> : 30
-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10
- 대한성공회 10

<불교> 150 - 200명 정도

- 한국불교종단협의회(27개 종단)
- 대한불교 조계종 <http://www.buddhism.or.kr/> : 100
- 태고종 50
- 진각종 30
- 천태종 30

학계 :

1. 국공립대학교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건양대학교(사회복지학과),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경제학과), 가톨릭대학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인하대학교(법학과) 이상 15개 대학

2. 사립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 세종캠퍼스(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이주대학교, 이주대 공공정책대학원(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사회복지학과), 서울여자대학교, 한림대(사회학과),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국대학교(법학과),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이상 16개 대학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인식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군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사회지도층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리나라의 군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제언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아래의 질문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 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 장 김 세 군

담당연구원 공 석 기

문1) 귀하는 다음 각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①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1	2	3	4
② 정부는 UN 인권기구의 권고(대체복무제 도입)를 받아들여야 한다.	1	2	3	4
③ 대체복무제 도입은 한국의 인권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④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1	2	3	4
⑤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다.	1	2	3	4
⑥ 대체복무제 도입은 현역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1	2	3	4

문2) 다음은 2007년 9월에 발표한 국방부의 '병역 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방안'의 내용입니다. 귀하는 각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안함	전혀 동의안함
① 종교적 사유 이외의 병역거부 사유는 대체복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2	3	4
② 현역/예비군 복무 중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3	4
③ 복무방법은 출퇴근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한다.	1	2	3	4
④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으로 한다	1	2	3	4
⑤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한다.	1	2	3	4

문3)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역복무와 같아야 한다 (현재 24개월)
2. 현역복무의 1.5배 이내 (36개월 이내)
3. 현역복무의 2배 이내 (48개월 이내)
4. 현역복무의 2배 이상 (48개월 이상)

문4)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한 복무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소방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
2. 양로원, 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
3.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단체(NGO) 중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근무

문5)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복무 형태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출퇴근 형태
2. 합숙 형태

문6)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초기에 그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예: 1년에 1,000명으로 제한)으로 사회적 우려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문7)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 허용 사유가 어느 범위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특정 교파에 한정된 종교적 신념
2. 일반적 종교적 신념
3. 종교적 신념을 포함한 반전평화주의 신념

문8) 귀하는 만약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어디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역 입병 전까지만 선택가능
2. 군복무 중에도 선택가능
3.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도 선택가능

자료 분류영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Q1) 실례지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1. 남
2. 여

DQ2) 실례지만, 귀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2.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DQ3) 실례지만,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3.

1. 국회의원
2. 법률가
3. 교수
4. 언론인
5. 종교인
6. 기타 (무엇:)

DQ4) 실례지만, 귀하의 현재 결혼상태는 어떻습니까?

- | | |
|-------|-------|
| 1. 미혼 | 2. 기혼 |
| 3. 이혼 | 4. 사별 |
| 5. 별거 | 6. 동거 |

DQ5) 실례지만,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불교
2. 개신교(교회)
3. 가톨릭(성당)
4. 원불교
5. 기타 종교
6. 종교 없음(무교)

DQ6) 실례지만, 귀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가) 행정구역

- | | |
|----------|----------|
| 1. 서울 | 2. 부산 |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경기도 |
| 9. 강원도 | 10. 충청북도 |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 15. 경상남도 | 16. 제주도 |
| 17. 북한 | 18. 외국 |

나) 지역 규모

1.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 중소도시 (시 지역)
3. 읍, 면 이하

아래의 문항은 직업과 관련한 구체적 문항입니다.
귀하의 직업에 맞는 설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귀하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면
다음 질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DQ3_1_1) 귀하의 소속 정당은 어디십니까?

- | | |
|----------|----------|
| 1. 한나라당 | 2. 민주당 |
| 3. 자유선진당 | 4. 친박연대 |
| 5. 민주노동당 | 6. 창조한국당 |
| 7. 무소속 | |

DQ3_1_2) 귀하는 선거구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지역구
2. 비례대표

만약 귀하의 직업이 교수라면
다음 질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DQ3_2_1)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대학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국립대학교
2. 사립대학교

DQ3_2_2)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학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법학과 | 2. 정치학과 |
| 3. 경제학과 | 4. 사회학과 |
| 5. 사회복지학과 | 6. 기타 (무엇:_____) |

만약 귀하의 직업이 언론인이라면
다음 질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DQ3_3_1) 귀하가 종사하고 계신 매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신문
2. 방송
3. 인터넷 매체

만약 귀하의 직업이 종교인이라면
다음 질문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DQ3_4_1) 귀하의 소속 종단은 어디십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